

진통하는 대학

송 호 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1. 개혁의 계절

몇 년 전부터인가, 내 주변의 친구 교수들이 대학 조직을 개혁하는 작업에 대거 투입되었다. 미국과 유럽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외국박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의 경험을 대학개혁에 접목시키겠다는 대학당국의 뜻 때문이었다. 그 친구들은 연구의욕이 가장 왕성한 사십대 초·중반의 귀중한 시간을 이 작업에 선포 할애했다. 그 일이 무척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는 측도 있었고, 아무런 성과 없이 동료교수들의 원성만 샀다는 푸념파도 있었다. 바야흐로 무풍지대였던 대학에 거대한 변혁의 바람이 몰아닥친 것이다. 변혁의 방향은 말할 것도 없이 경쟁 강화. 경쟁의 방향은 두 가지이다. '대학간 경쟁'과 '대학내 경쟁'. '90년대 중반까지는 대학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더니, 이제는 대학내 경쟁이 코앞에까지 밀려왔다. 대학간 경쟁이란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하여 시설투자,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대학내 경쟁이란 특성학과 배양, 우수 교수 확보, 연구풍토 개선을 위한 교수간 경쟁 도입이 주된 목표이다. 필자가 '90년대 초반 재직했던 지방 사립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유치를 위하여 특별홍보팀을 가동했고, 입시철이면 교수들을 지방 명문고등학교에 파견하여 학교

설명회를 열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 아는 서울대학교에서도 '99년도에 대학홍보팀을 신설하게끔 되었으니 대학간 경쟁열기를 짐작케 한다.

대학의 이런 경쟁열기는 동면상태에 있던 대학을 깨워 세계 수준의 교육기관을 만들어 보겠다는 각성과 의지의 소산이다. 외국 평가기관에서 간간히 발표하는 세계 우수대학 리스트에 한국의 명문대학이 축에도 못끼는 불명예를 씻고, 무한 경쟁이 휘몰아치는 세계질서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겠다는 몸부림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개혁의 열풍은 조금 더 일찍 시작되어야 했다. 한국의 대학은 우리 사회의 고유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열기에 편승하여 학부모들이 보내주는 학생들을 잠시 받았다가 다시 방출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해 왔을 뿐이다. 4년 기간을 담수하는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해주었는가는 대학에 일임했다. 학부모도, 대학당국도 졸업장에만 신경을 썼다.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대학에서 발행하는 졸업장은 영국 대학이 수여하는 거주증명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교수와의 대화, 동료와의 활동, 대학이 제공하는 전인적 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는 확인이 거주증명서라면, 한국의 대학졸업장은 40여 개의 강좌를 수학했다는 보증서이다. 그런데 A학점과 D학점 간에 별로 학

력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D학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풍토가 얼마 전까지도 캠퍼스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것 강의보다 친구들과의 비공식적 커리큘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 등등 대학교육에 대한 냉소적 표현은 셀 수 없을 정도이다. 대학개혁이 절박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게 된 저간의 사정이다. 대학개혁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2. 관주도(官主導) 개혁

한국에는 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존재하지만, 그 구분은 학비부담의 차이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대학교육은 모두 교육부의 관할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왜 교육을 국가가 관리하는가의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제 한국의 모든 대학이 최대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점은 의아하기까지 하다. 세계화가 다양성의 증진을 요구한다면, 170여개에 달하는 한국의 대학은 170여 가지의 서로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명문대학으로 갈수록 개혁목표와 방향은 동일하고, 개혁프로그램을 서로 베끼기까지 하는 사태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상위권 대학에서 만들어진 개혁모형은 다시 중하위권 대학으로 확산되고 급기야는 전문대학으로 파급된다. 아마 개혁이 일단락된 어느 시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대학은 각자의 개성구분이 어려운 닳은 꼴의 형태로 다시 귀착될 예정이다. 왜 그럴까? 말할 것도 없이 교육부의 행정관리 때문이다. 관주도 개혁하에서 대학은 자율성을 상실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이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입시제도가 엘리트 선별과 충원의 가장 중요한 기제로 정착된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을 시장경쟁으로 내버려 둘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고, 또 행정관리

의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플랜을 개발하려는 대학들도 정책결정권과 예산집행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의 개혁 청사진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교육부 정책을 거부했다가는 예산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여타의 다른 영역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많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관주도 개혁의 위력은 돈과 행정규제력에서 나온다. 대학이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부응하여 스스로 변신하지 못했다는 점이 교육부가 자주 활용하는 관주도 개혁의 명분이지만 학비 인상, 학과 신설, 교수임면 등 중대 사안을 일일이 교육부에 보고하여 도장을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혁지체의 책임을 대학에게 묻는 것도 무리이다. 아무튼 예산과 행정규제라는 위력적 무기로 교육부는 대학개혁을 밀어부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대학개혁이 예산따먹기로 인식될 정도이다. 선정된 대학이 교육부 정책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사후 평가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개혁작업에 투입되었던 친구 교수들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개혁시안을 멋지게 그려내는 일과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정책이 매년 바뀐다는 점을 과거의 경험으로 터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그때 배정된 정책예산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대학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친구 교수들이 이 작업에 매년 투입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들은 이제 멋진 계획서를 단 시간에 제조하는 기술을 습득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 발생한다. 예산확보에 성공한 대학의 집행부와 평교수 사이에 의견조율이 그다지 쉽지 않고, 때로는 교수들의 집단반발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90년대에 들어 이런 일을 종종 목격하였는데, 대개는 지원된 예산에 첨부된 이행조건에 관한 시비가 대종을 이룬다. '90년대 초반 이후 교육부는 '대학간 경쟁'과 '대학내 경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시장기제를 도입하여 왔다. 교육과 연구업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만들어 이를

예산 배분의 지표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었는데, IMF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급격하게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평생고용을 보장받던 대기업에도 정리해고의 바람이 몰아친 만큼, 대학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기세이다. 교수도 좋은 상품을 만들어 잘 팔지 못하면 정년은 물론 월급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세가 그러하니, 받아들일 수 밖에. 더욱이 사회의 모든 영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대학이라고 변혁 요구에 면제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하여 필자도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을 앞에 두고 무능력 교수로 낙인찍히지 않으려고 내심 고민중이다.

3. 교수들의 고민

교육부의 대학개혁 원칙은 시장경쟁의 도입이다. 승진, 정년보장, 연봉을 연구와 교육업적, 사회활동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것인데, 비야흐로 교수의 철밥통이 깨지는 순간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의 일인왕국이었던 강의실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는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는 데에 교수들의 심기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시장경쟁은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에 가장 적합한 운영 원리이다. 그런데 대학이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인가? 교육부의 입장은 '그렇다'는 것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생산성 개념이 적용되듯이, 대학에도 교육경쟁력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교육경쟁력 또는 연구경쟁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명문 사학인 연세대학교에서는 1996년도 승급대상자 중 약 35% 정도만 통과시켜 규제를 강화하였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97년에 2명이 승진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한국에서 직업안정도가 가장 높고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이른바 평생직장으로 인식되어 온 직업은 몇 개 안 된다. 공무원, 교사와 교수,

판검사 등이 평생직장에 해당된다. 공무원과 판검사는 상사를 모셔야 하고 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직무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정치권의 변화에 민감한 적응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비하면 교수직은 그야말로 무풍지대이다. 교수를 감독하는 눈은 그들의 동료인 대학본부의 보직교수들과 학생들이다. 전자는 동료라는 점에서 후자는 제자라는 점에서 약간의 실수와 직무대만은 일종의 멧과 여유로 인식된다. 그래서 연구태만을 이유로 평생직장을 위협당하는 것에 교수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업적 평가에 반발하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학문 성격과 조건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편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학술지 논문게재는 100점, 외국 학술지 논문게재는 200점으로 정할 때 한국학 관련 분야 교수의 반발은 명약관화하고 타당성도 있다. 외국 의존적, 굴욕적 태도라는 사뭇 민족주의적 비난에 대학지도부는 금세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된다. 또한 전국 규모의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갖지 못한 소규모 학문분과의 교수들은 평점을 높이는 데에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대학학술지의 발행을 적극 장려하면서도 전국 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교육부의 일반적 인식이고 보면, 대학학술지가 번성할 리 없다.

업적 평가는 대개 연구논문의 경우, 학내·외의 동료교수에게 맡겨지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일 년에 몇 번씩은 학회에서 마주쳐야 하고 때로는 공동연구팀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연구업적을 폄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심사의 객관성을 주문하지만 평소에 익히 아는 사람일 경우, 기준은 연구의 수월성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심사대상자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대학의 교수들도 평생교수직(Tenure)의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동료교수들의 상호애가 발휘된다. 학회는 일종의 비밀결사체와도 같아서 클럽문화가 강하

게 지배한다. 여론매체와 대중적 접촉에 대하여 동업자 인식이 우선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의 테뉴어임사는 흔히 클럽문화의 행위양식에 의하여 관리된다.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대중적 지성인들은 아이디어의 자유시장에 그들의 신선한 생각과 사고를 꾸준히 팔아야 살아남는다. 이에 비하면 대학교수들은 두 개의 완충지대를 소유하고 있다. 동료 집단의 지원자격과 평생교수직 심사가 그것이다. 교수의 논문과 아이디어는 대중적 판단과 평가에 앞서 동료 교수들에 의하여 먼저 이루어진다. 열은 끈으로 연결된 동업자 인식은 교수들로 하여금 서로의 업적에 대하여 후한 평가를 내리도록 이끈다. 그리하여 때로는 별 것 아닌 아이디어도 화려한 치장을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실제로 저널리즘에서 실력을 쌓아온 언론인들은 교수들이 향유하는 이런 종류의 프리미엄을 시샘하여 종종 대학에 대한 여론의 총체적 불신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관료로 지낸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앤더슨(Martin Anderson)은 이런 취지에서 대학교수들을 맹렬히 비난한 바 있다. 『절간의 사기꾼들』(Impostors in the Temple)이라는 저서에서 그는 저널리스트들의 직업은 냉혹한 자본주의 법칙으로 지배당하는 데에 반하여 “미국의 대학교수들은 의사(疑似)사회주의적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한다”고 묘사하였다. 교수들이 집필하는 일간지와 대중지의 기고문과 민간연구소의 정책연구 등은 모두 자본주의적 법칙을 집약하는 표현물임에 반하여 정작 그들이 몸담고 있는 현대의 대학은 “의사 사회주의의 작은 오아시스”(a tiny oasis of quasi-socialism)라는 것이다.¹⁾

앤더슨의 비난은 조금 과장된 면이 보이지만 교수들의 업적이 비밀결사체와 같은 내부자들의 평가에 의하여 가능되거나 보호되고,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쟁법칙이 대학 내부에서는 현저하게 약화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리하여 교수들을 발가벗겨 자유 시장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적 기조 때문에 모든 사회조직체에서 능력과 업적 위주의 인사관리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주장은 일관성을 갖는다. 사실상 교수들의 활동이 사회의 각 분야로 확대되면서 교육과 강의에 쏟는 절대적 시간은 축소되었다. 강의와 교육에의 헌신을 줄이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첫째, 학부교육의 중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는 추세이다. 실제로 대학원의 규모와 학생수는 1980년대 이후 급증하였다. 학력인플레이션도 한 몫을 하였으며, 평생교육원과 같이 대학이 사회봉사 기능을 확대하면서 교수들의 학부 강의 부담이 줄었다.

둘째, 잡무의 문제이다. 교수들의 대학생활은 밖에서 미루어 짐작하는 것과는 달리 결코 화려하지도 한가롭지도 못하다. 하루 일과 동안 끊이지 않는 잡무에 시달려야 한다. 면담, 행정, 학과의 공식적 일과 비공식적 일, 서류 만들기 등등 연구 이외의 일을 처리하기에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의 업무량을 갖고 있다. 오죽하면 총장 선거의 공약에 “교수들을 잡무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구절이 나타나고 교수들의 환성을 사겠는가?²⁾

셋째, 사회적 변화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지식의 사회적 수요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과거에 대학이 만들어내

1) David Damrosch, *We scholars: changing the culture of the university*, 49쪽에서 재인용.

2) 잡무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캠퍼스 탈출이다. 최근 캠퍼스 근처에 별도의 연구실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1996년 서울대 총장 선거에서 한 후보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잡무 해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공약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캠퍼스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는 지식의 주된 수요자가 학생이었음에 반하여, 현재는 정부와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상호인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될 정보화 사회에서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정상급 두뇌집단으로서 교수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할 것임에 틀림없다.

넷째, 특히 국공립대학의 교수월급이 민간기업에 비하여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점점 높아가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수들은 사회에서의 요구를 마다하지 않게끔 되었다.

이에 반하여 교수를 대학 안으로 끌어들이는 여부는 교수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규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교수들은 획일화된 규제에 강한 반발을 보인다.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떤 조치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연구는 고립된 활동이며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소외를 자처해야 가능하다. 대학은 '격리된 개인주의' (isolated individualism)를 보호한다. 개인적 자율성과 개인주의를 잘 보호하는 대학일수록 연구수준이 높아진다. 말하자면 소외된 활동이 학자의 덕목이다.³⁾ 외로운 작업은 사실상 평생 계속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독서와 사색이며 논리의 개인적 강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자율성과 개성을 요구한다.

4. 리더십의 중요성

대학 내부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힘이 작용하는 마당이고, 대학조직을 운영하는 교수들은 의사 사회주의적 방식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대학은 조직생존을 위하여 다른 조직체들과 시장 경쟁을 치러 나가야 한다. 그러나 대학이 이러한 경쟁을 치러 내기에는 대학 내부의 정치와 외부의 정치가 원리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상

호모순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대학 내부의 정치는 자율성과 일정한 권한으로 무장한 영주들의 의견 전시장 (talking shop)이며 어떤 중대 사안에 관한 한 깨끗한 합의가 어려운 반면, 대학은 조직체로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수요에 민감하게 부응해야 하는 현실에 당면한다. 최근에는 다기화된 사회적 수요를 흡수하느라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수한 서비스로 단장한 단기 코스의 교육기관들이 속출하여 대학이 누렸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은 타대학들과 무한경쟁의 장에 던져져 있으면서 동시에 다양화된 사회교육기관들과 경쟁력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학의 주수입원인 학생수의 감소와 연구기관의 다기화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수입격감에 의하여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다.

개혁을 요하는 문제는 수없이 많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논의되고 많은 해결방안들이 제안된다. 그러나 논의의 무성함과 행동의 결여가 학내 정치 (school politics)의 특징이다. 사실 정치는 대학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학과업무, 강의, 교과과정, 연구비 지급, 연구와 관련된 사항, 신입교수 채용, 선거, 예산배정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교수회의실과 교수회관, 사적 모임과 공식 회의에서 논의되고 점검된다. 교수들의 관계는 이런 비공식적·공식적 모임을 통하여 발전된다. 그러나 학교 정치는 때로 교육과 연구에 관련된 근본적 문제들을 현란한 수사학 속으로 밀어 넣는 은폐막의 기능을 담당한다. 실천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데에 대한 변명이 학교 정치의 장에서 합리화되는 것이다. 교수들은 원리원칙에 강한 사람들이어서 단 한 시간의 회의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굽히거나 신념을 바꿀 사람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여타의 사회집단과 조직체가 경쟁을 통하여 발전과 진화를 지속한다고 하면, 대학에는 시장경쟁이 좀처럼

3) Henry Rosovsky, *The University: An Owner's Manual*, New York : W.W. Norton, 1994, pp.153~154.

럼 적용되지 않는다.⁴⁾

사업계에서 경쟁은 효율성·가격하락·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한다. 스포츠에서 경쟁은 선수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용맹성을 최대한 발휘토록 도와 준다. 자연계에서 경쟁은 적응력을 갖춘 다양한 종(種)으로의 진화를 촉진하고 질병에의 면역성을 길러 준다. 그러나 고등교육에서 경쟁은 복제와 모방에 대한 불만, 지원 요청, 규칙적응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 신참자들에 대한 규제강화 요구 등을 촉발한다.

그래서 대학은 개혁을 요하는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면,⁵⁾

행정적 낭비·사기·남용에 대한 불만, 학문의 본질적 가치와 규준의 부패에 대한 불만, 학부강의의 열악성과 침체, 학문적 공과체계의 왜곡, 업적주의(meritocracy)의 붕괴, 공유적 의사결정체계의 절충적 양식에 대한 기업적·관료제적 통제의 승리, 교양인의 시각과 양식을 규정하는 열정적이고 건강한 교과과정의 학문적 책임과 권위를 가진 교수들에 의하여 스스로 포기되는 현상, 공적 신뢰성의 부식, 연구대학의 사명을 공고히 할 학문공동체 지도자의 비전 결여, ... 무엇보다도 학문공동체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열정적 주장의 결여 등.

연구의 침체를 낳는 병인과 질병의 리스트는 대단히 길며 또한 각각의 항목도 낫설지 않은 것들이다. 시장경쟁의 도입으로 해소될 질병이 있는 반면, 더 심각해질 것도 다수이다. 대학의 본질은 시장원리와 어울리지 않는 요인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모순을 풀어가는 데에 대학의 리더인 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총장들은 내부 정치와 외부 정치간의 괴리 때문에 정책적 딜레마에 빠

져 있다. 총장들은 개인적 권위와 권력을 갖추더라도 내부 정치와 외부 정치간의 괴리에 함몰되어 정책을 펴 나갈 수 없는 것이 근본 문제이다. 외부와는 시장경쟁에 봉착해 있으면서 내부문제는 교육부의 관료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자율성을 외치는 교수들의 행위양식을 돌파해야 한다. 총장 취임사에서 강조되는 대학의 이념과 본질은 단지 수사학일 뿐 누구도 진중하게 듣지 않는다. 이런 경우 대학의 리더들은 '양면성의 정치'가 자아내는 모순에 빠져든다. 대학 총장 선거에서 자주 등장하는 총장 역할론에서 총장은 대학이념을 보강하고 전파하는 지성의 수호자이기 보다는 '갈등의 조정자' 이기를 자임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갈등을 갈등 없이 다스리고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총장의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시장기제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당면 문제의 해결은 세련된 정치를 요하지만, 그것이 대학인 만큼 대학의 비전과 본질을 되새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正道(正道)일 것이다.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을지라도 격리된 연구공간에서 대학의 이념에 대한 끝없는 향수를 되새기는 것이 직업인으로서 교수의 습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전과 철학을 갖춘 대학공동체의 리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림대 교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부설 사회발전연구소장, 사회비평 편집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지식사회학』,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시장과 이데올로기』, 『열린 시장, 닫힌 정치』, 『시장과 복지정치』, 『또 하나의 기적을 향한 짧은 시련』 등이 있다.

4) Stephen M. Stigler, "Competition and the Research Universities," in Jonathan R. Cole, Elinor G. Barber (eds.), *The Research University in a Time of Discontent*, Baltimore and London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5) Jonathan R. Cole, *Balancing Acts : Dilemmas of Choices Facing Research Universities*, 위 책.